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기자회견(안)

- 일시 : 2009년 7월 8일(수)
- 장소 : 경기도청 앞
- 주최 : 6.15경기본부/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진보연대

■ 식순

사회 : 민진영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계 발언 1 : 6.15경기본부

각계 발언 2 : 민주당

각계 발언 3 : 민주노동당

각계 발언 4 : 창조한국당

각계 발언 5 : 진보신당

각계 발언 6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계 발언 7 : 민주노총 경기본부

선언문 낭독 : 경기진보연대

첨부.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 선언문

6.10 민주항쟁이 22년이 지난 2009년 6월, 우리 국민들은 다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남북관계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1%의 소수를 위한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국민들은 현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폭력도 서슴치 않고 자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폭력은 물론 서민들에 가해지는 일상화된 권리와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강부자 내각과 소수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토목공화국을 기치로 든 이명박 정부는 재벌건설사, 부동산 투기꾼 등 1% 이익집단을 챙겨주는데 여념이 없다. 이와 다르게 IMF보다 더 혹독한 고용불안과 실업자 양산, 가혹한 물가는 서민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2012년까지 100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으며 무려 22조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소위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에 쏟아 붓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를 막기 위하여 인터넷 자유공간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사이버감옥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80년대 신군부식의 언론정화와 소수 재벌언론에게 모든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언론악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의 장기 집권계획을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2년 연장이라는 빈곤 고착화 정책을 강행하려다 시민, 노동, 사회계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여 노동자, 서민에 대한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관심 없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 어떠한 평화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출범 초 ‘비핵개방 3000’이란 대북 적대정책을 들고 나와 북한을 자극하더니 급기야 국제적인 찬사와 공인을 받은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쇠고기 사건, 용산 참사, 박종태 열사의 죽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등 수많은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

은 명박산성으로 표현되는 소통거부와 공권력을 앞세운 무차별적 연행, 보수언론을 통한 진실 감추기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집권여당 내에서도 국정쇄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마이웨이를 외치며 강압통치방식과 MB악법 강행처리로 맞서려 하고 있다. 이에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통치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생, 지역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민주주의 수호, 민생 살리기,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회복을 원하는 모든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광장을 가로막고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모든 독재식의 발상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정대전환을 요구한다.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등 모든 악법에 대한 강행추진을 철회하고 대운하 재추진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표현과 비판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파탄 나며 남북관계가 전쟁위기로 치닫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가는 것이 모든 국민적 갈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언론법, 비정규관련법등 모든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다수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라!
-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취들을 강구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표적수사 정치검찰 대검중수부 폐지하라!
- 대운하 위장사업 '4대강 사업' 백지화하라!

2009년 7월 8일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 선언참가자 일동

김문수 도지사에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 서울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학계, 종교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면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주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행위와 그 내용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영똥한 궤변으로 시국선언을 비하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를 받고 있다.

먼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5일 기념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격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라며 사실상 ‘북진통일론’ 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 라는 미명하에 남북관계를 궁지를 몰아넣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그런데 휴전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기도지사로서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결국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냉전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높이려는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김문수 도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경부)운하를 한꺼번에 해 국민들이 놀라니까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 으로 먼저 1단계가 경인운하” 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일환으로 경인운하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경인운하 사업은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이며, 이것은 현재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사실상 거짓임을 김문수 도지사가 만천하에 알려준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준설과 개발, 경인운하 강행하려는 김문수 삼철도 지사의 한심한 수작은 또 다른 국민혈세 낭비사업이므로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전국적 현안에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가 유독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발언은 물론 대응조치 하지 않는 것

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살인적인 정리해고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하청업체와 그 종사자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채를 비롯한 잘못된 국정운영도 문제이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현실인식과 행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앞서 거쳐간 도지사들의 전철처럼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도민을 우롱하는 경박한 정치인 김문수로만 보일 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정치적 행보만을 진행하는 김문수지사에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 김문수 도지사는 전쟁불사 북진통일등 호전적 발언을 사과하고 남북평화 공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문수 도지사는 쌍용차회생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 대운하 사전작업 경인운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8일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 선언참가자 일동

시국 선언 참가단체 및 인사

< 연명 >